

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,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

1. 관련 기사

- ☐ 2.11.(수) 한국일보, “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땀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”
- ☐ 2.11.(수) 조선일보, “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...환영 못받는 ‘근로자 추정제’”

2. 설명 내용

- ☐ ‘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’과 ‘근로자 추정제도’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
 - 기술혁신과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됨에 따라,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 테두리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
- ☐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은 포용적 노동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지만
 - 4대 보험, 퇴직금, 최저임금 등 구체적 적용 대상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함
- ☐ 근로자 추정 제도는 모든 특수고용·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,
 -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
 - 추정 제도가 도입되면 입증책임의 분배로 더 많은 정보에 바탕한 정확한 근로자성 판단으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, 형식과 실질이 다른 가짜 계약관행이 현장에서 통용되지 못할 것임

-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포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성안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허기훈 (044-202-7761)
		담당자	사무관	김윤지 (044-202-7762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진 (044-202-7526)
		담당자	서기관	이재인 (044-202-7544)
		담당자	서기관	신솔원 (044-202-7527)

